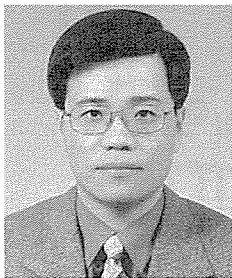


흡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접 흡연따른 경제적 손실만 연 6조원 담배값 지출·질병치료비 외 산불의 주범



李州烈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한국, 흡연관련 폐암 9천5백명 사망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 사회적으로 흡연을 큰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흡연장소를 제한하고 연령에 따라 흡연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의 실효성은 낮으며 흡연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아직은 관대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에게 담배는 해로운 것이라는 이미지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학적으로 흡연은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발기부전, 청각장애, 시력감퇴, 골다공증 등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된다. 미국의 경우, 매년 사망자의 1/6이 흡연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폐암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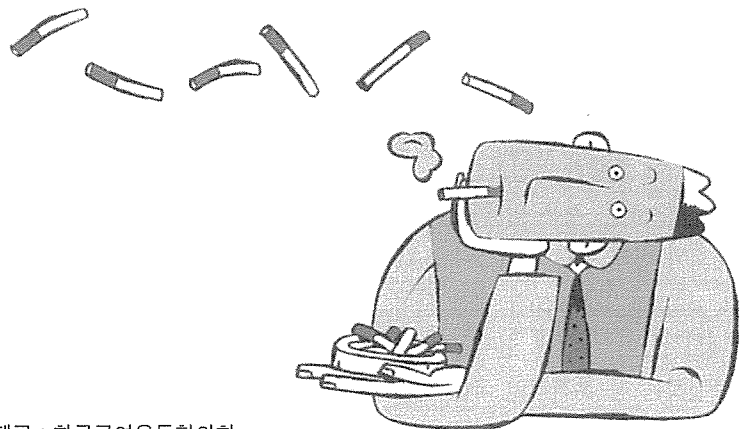
사망의 87%, 모든 암에 의한 사망의 30%, 관상동맥성 심장병에 의한 사망의 21%, 뇌졸중 사망의 18%가 흡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흡연과 관련한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비용으로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비의 9.2% 정도가 소요된다.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해 매년 2천억달러의 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가량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매년 3만5천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흡연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폐암 사망자는 9천5백명 정도가 된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치료 비용, 결근, 화재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 등을 고려하여 보건경제학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를 연간 6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오염, 간접흡연에 따른 손실 등을 합하면 흡연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한편,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보건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분석방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매일 보통의 담배 1갑씩을 50년간 피울 경우 지불하여야 할 비용이 엄청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흡연의 경제적 효과 내용〉 흡연의 경제적 효과는 주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흡연에 따른 비용은 직접비용, 간접비용,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실로 나누어



그림제공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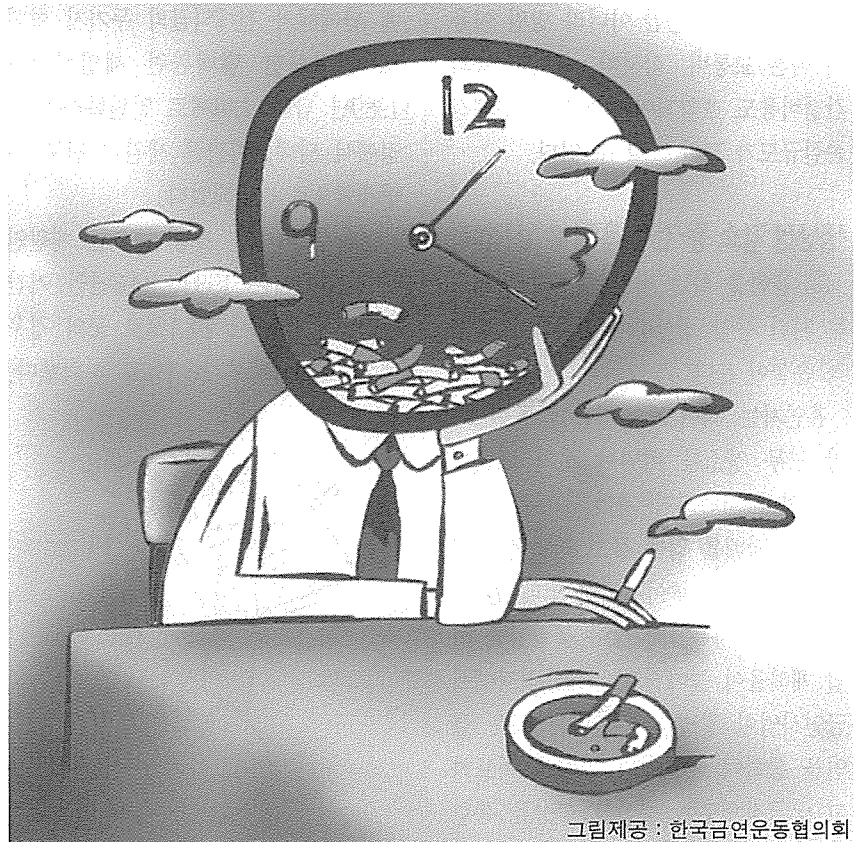
진다. 직접비용에는 담배에 대한 소비 지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용, 질병치료를 위한 시간비용 및 병원 교통비,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되며, 간접비용에는 흡연에 따른 질병, 장애, 조기 사망, 결근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생산인력 손실이 포함된다.

흡연의 편익 또한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나뉘어지는데, 직접편익에는 엽연초 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담배제조에 따른 부가가치, 담배판매상의 판매소득, 담배판매에 따른 소비세, 담배수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액이 포함되며, 간접편익에는 담배소비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 증가가 포함된다.

그러나 흡연의 비용-편익 분석을 다룬 실증적 연구에서 소비자 잉여는 제외되고, 직접편익에 속하는 엽연초 재배농가의 소득 등 직접편익과 관련된 4개항을 합한 금액은 직접비용인 담배 소비 지출량과 일치되어 서로 상쇄된다. 따라서 흡연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상호 상쇄되는 항목을 제외시키고 나면 결국 흡연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손실 분석이라는 특징이 있다. 금연의 필요성과 관련된 흡연의 경제적 손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증가는 사회적 경제가치의 손실을 초래한다

세계적으로 매년 2백50만명 정도가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3만5천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매년



그림제공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만2~3천명이 사망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흡연과 관련된 사망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흡연에 따른 조기사망은 흡연자가 흡연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존하여 직장 및 사회에서 활동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를 모두 손실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된다.

② 흡연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여 진단 및 치료하는 데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

흡연자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린다. 담배를 장기간 피우게 되면 심근경색에 이환될 확률이 3배,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2배나 증가한다. 그 외에 혈액순환이 안되어 겨울에 동상

에 이환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담배 속에 있는 20여종의 독성물질은 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비흡연자에 비하여 흡연자는 폐암 발생 확률이 6~9배, 구강암 발생은 13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방광암, 식도암, 간암, 위암 등의 발생이 흡연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 알려진 암의 30~40%는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이 여러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됨에 따라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흡연자는 개인적으로 질병과 관련하여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며, 국가적으로도 국민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질병과 관련된 비용은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의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에 따른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등의 간접비용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산성 감소 등 간접 흡연 손실 막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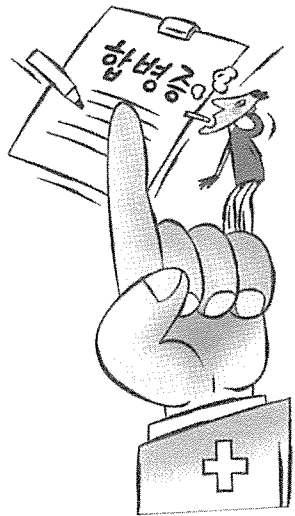
③ 흡연을 하는 직장인은 담배 피우는 시간 동안 생산량이 감소되어 경제적 손실이 온다

흡연자는 적어도 한시간에 한번 이상 근무 장소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며 자리를 비우지 않더라도 담배를 입에 물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거나 담배 권 손의 놀림이 자유롭지 않아 불량률과 산업 재해율이 높아진다. 최근 직장에서 금연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은 금연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측면의 흡연의 경제적 영향〉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담배에는 소비세,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건강부담금 등이 부과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4조원 정도가 된다. 특히 담배 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담배 수익이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등장한 것은 1985년 담배 판매세의 도입이었다. 담배 판매세의 도입 이전까지는 전매사업으로 발생하는 전매익금의 형태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중앙재정의 주요한 재원이 되었다. 그러나 1985년 담배 판매세가 도입이 되면서 담배소비와 관련한 세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담

배 판매세와 전매익금의 두가지 형태로 존립하던 담배관련 세입체계는 1989년 담배 소비세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담배소비관련 세원이 전부 지방세원으로 전입되었다.

담배 소비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인 시의 경우에는 1989~1998년의 기간 동안 48.9%에서 24.1%로 군의 경우에는 66.9%에서 36.1%로 하락했다.



그림제공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비록 담배 소비세의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담배판매와 관련된 세원의 중요성은 지방재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에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에 1백50원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흡연이 국가 재원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흡연은 국가경제 손실의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국가 재원에 도움을 주는 모순되는 두 측면을 갖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연열풍으

로 담배소비가 감소하고 이런 결과로 당초 예상했던 건강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국가가 독점적으로 전매사업을 담당해 왔고, 그 수익으로 각종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흡연을 통하여 국가 재원의 일부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국민 건강의 손실을 담보로 마련한 재원을 금연사업 및 흡연 피해자 예방사업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국가 경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금연사업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금연이 확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감소되는 현실에서 금연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가 진정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의 내용을 조정하고, 그 세금의 사용도, 흡연예방, 금연사업, 흡연자 건강검진, 흡연실 장비설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흡연 분위기의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 국가 금연정책은 설득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담배산업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담배세의 사용도 국민 건강보호라는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금연은 흡연에 따른 건강피해 뿐만 아니라 흡연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